특별기고

‘시인 문병란의 집’을 개관하며

임 택
광주 동구청장

1980년 5월19일 교단에서 해직된 후 학원 강사로 일하던 문병란 시인은 5·18 수배령을 피해 급히 새벽길을 나선다. 손에는 부인의 결혼반지와 친구가 쥐여준 10만 원이 있었다. 아내와 아들은 서울로, 세 명의 딸들은 순천으로, 자신은 여수의 제자 집으로, 빈집은 흰둥이만 지키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 시인은 자택에서 수갑에 묶여 나왔다. 하교하던 까까머리 중학생 아들과 마주친 것은 참 미안할 일이었다.

광주 동구 밤실로 4번안길 16. ‘질 고운 달빛이 그득하고 아직 외상술을 주는 동네’라고 시인이 노래한 곳. 걸어서 5분 거리에 서양화가 오지호의 가옥이 있고, 그곳에서 몇 걸음 더 걸으면 6월의 청년 이한열의 집이 있는 동네. 그 동네의 어디쯤 문병란의 집이 있다. 전국적으로 이름깨나 있던 재야인사들이 번갈아 가며 숙식을 의탁하기도 했던 곳. ‘8번의 이사’ 끝에 정착한 40평 조금 넘는 집. 아들 앞에서 수갑에 묶여 가던 1980년부터 2015년 타계할 때까지 시인이 살던 곳이다.

저서·연보 볼 수있는 공간

지금은 광주 동구가 매입해 ‘시인 문병란의 집’으로 새롭게 단장, 시범 운영을 거쳐 지난 10일 정식 개관했다.

건물 1층에는 자개농이 놓인 ‘시인의 방’과 대표 저서와 연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내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오르면 필사공간, 영상실, 그리고 ‘시인의 서재’가 있다. 서재에는 ‘자본주의 발달사’ 같은 사회과학책부터 시집, 문학잡지, 대중가요 책 등이 다양하다. 5·18 최초 기록서이자 민주화운동의 불덩이였다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펼치면, 위험을 각오하고 책의 제작에 관여한 이의 색바랜 서명을 볼 수 있다.

‘화염병 대신 시를 던진 한국의 저항시인’(뉴욕타임스)이라는 거창한 칭호 뒤에는 ‘두 눈이 말똥말똥 고와 가는 애들’을 생각하며 ‘사직서에 바르르 떠는 초라한 아버지’(실직기)가 있다. ‘해마다 5월이 오면 부끄럽고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꽃처럼 곱게 타오를 수 없는 봄’(5월의 연가)을 한탄하기도 한다. 그러다가 문득 찾아오는 ‘절망’을 거부하며 ‘몇 그램의 분노’(어느 날 아침)를 자양분 삼아 시대의 불의에 저항한다. 이철규 열사 추모사업회장,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광주·전남 공동대표 등 도무지 그 시대로서는 별 이득은커녕 탄압의 표적만 됐을 수많은 감투는 그가 수시로 찾아오는 절망에 꺾이지 않고 행동했던 ‘몇 안 되는 움직이는 운동가’였다는 징표이다.

그러나 그가 ‘우렁차고 뜨거운 가슴’으로만 노래한 것은 아니다. ‘비판하면서도 미학을 포기하지 않은’ 그는 ‘산골 개울물’과 같은 ‘맑은 서정’도 지니고 있다. 앞집의 목련화를 보고는 ‘남의 꽃으로 봄을 맞았다’(봄 나들이)며 미안해하기도 하고 ‘꿈꾸는 자’에게 ‘고행길 멈추지 마라’고 위로(희망가)하며, ‘시를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시를 사랑한다는 것은)이라 노래한다.

‘시인 문병란의 집’에는 책 외에도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여러 흔적을 볼 수 있다. 지금은 들을 수 없는 카세트테이프에는 앳된 얼굴의 이선희와 조용필이 있다. 시인이 선물 받은 그림과 글씨, 교수 시절의 월급명세서와 시험 채점표는 소소한 그 시절의 흔적을 보여 준다.

민주주의 산 교육장

이곳은 책을 좋아하고 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종일 뒹굴거리며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공간이다. 도중에 허기가 지면 근처 지산유원지의 식당에서 배를 채우고 다시 와 책을 읽거나 시를 쓰면 그만이다.

동구는 하나둘 소리 없이 헐리고 사라지는 인문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철거될 뻔한 동명동 근대가옥을 ‘인문학당’으로 보전하는 일, 도시개발로 사라져 가는 삶의 흔적과 근·현대 동구의 인물을 발굴해 기록하는 일, 그리고 ‘시인 문병란의 집’을 조성하는 일까지 모두 그러한 의지의 결과이다.

동구는 이곳을 박제된 공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으로, 시민들이 끊임없이 함께 소통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꾸밀 생각이다. 많은 분이 이곳을 찾아 위로와 희망을 가져가길 바란다.

기고

농수산물검사소 개소 10주년을 돌아보며

기혜영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서부농수산물검사소장

이른 아침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형형색색의 과일과 채소들이 눈을 즐겁게 해준다.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사들이 뱉어내는 알듯 모를듯한 암호와도 같은 역동적인 외침은 들을수록 신기하기만 하다. 많은 농산물들이 여러 형태로 가공돼 입을 즐겁게 해주니 새삼 농산물 도매시장의 역할이 대단함을 느낀다. 하지만 필자의 직업상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생각할 때면 절로 마음이 무거워진다.

농산물을 생산하는 입장에서 보면 농약은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소득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존재다. 하지만 농약이 국가가 허용하는 기준치 이상일 경우에는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처럼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판정하는 기관이 ‘농수산물검사소’이다.

광주시의 농수산물검사소는 2011년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내에 처음 설치됐다. 이곳에서는 미량의 잔류농약을 검사하는데 질량분석크로마토그래프 같은 첨단의 분석장비를 이용해 6명의 전문인력이 주·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상시 검사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개소 당시 농산물의 잔류 농약 검사는 212개 항목에 대해 5시간 이내 결과를 통보했다. 현재는 311개로 확대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검사항목을 늘려갈 계획이다.

농수산물검사소에서 추진했던 검사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3만2,027건의 농산물에 대해 잔류농약을 검사했다.

이 중 도매시장을 통해 출하한 농산물은 2만183건, 5개 자치구와 로컬푸드 등에서 수거한 유통 농산물은 1만1,744건이었다. 검사결과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한 농산물은 330건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유통을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2014년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토대로 농산물별, 잔류농약 항목별로 분석해 농수산물 안전성보고서를 제작했다. 올해로 8번째 책자를 발행해 국회도서관,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대한 변화된 제도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지난 2019년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도입돼 적용되고 있다. 이전까지는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이나 유사농산물 최저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PLS 제도 시행 후에는 일률적 기준치인 0.01㎎/㎏을 적용하도록 변경된 것으로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알리고자 농수산물검사소에서는 PLS 제도 시행전에 생산자인 농민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교육을 실시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했다.

광주에는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과 각화농산물도매시장 두 곳의 공영도매시장이 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2020년에 각화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를 추가로 개소했다. 이로써 우리 시는 두 곳의 공영도매시장에서 검사소를 각각 운영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를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옛말에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농수산물검사소도 개소 10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농수산물검사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고감도 질량분석기 등 첨단 분석장비의 추가 구입과 잔류농약의 검사항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유해한 농약성분이 개발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그 성분을 검출해낼 수 있는 첨단 분석장비를 꾸준히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허용 기준치 이상을 사용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처리체계도 효율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2021년도 벌써 여름이 지나고 곧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다. 농수산물검사소 직원들과 함께 유통농산물을 철저히 검사해 안전한 먹을거리가 시민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어 본다.

독자광장

‘불나면 대피먼저’ 인식전환 필요하다

최근 다양한 시설들이 복합적인 형태로 발전됨에 따라 화재발생시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

완벽히 예방할 수 없다면 현명하게 대처해야 할 화재,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실제로 불이 났을 땐 과연 아는 만큼 행동 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소방청이 20~30대를 대상으로 한 화재 및 대피상식에 관한 인지도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본 결과 ‘큰소리로 화재 알리기’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119에 신고하기’였다고 한다. 물론 화재의 크기 또는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다.

재산은 다시 복구할 수 있지만 생명은 그렇지 않다.

잘못된 상황적 판단으로 대형 피해가 발생한 실례는 2018년 11월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다. 불이 난 3층 계단 부근의 방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고시원 전체에 전파를 하지 않고 10분 넘게 불을 끄려다 대형 인명사고가 났다. 만약 화재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유도 후 불을 끄려고 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초기 화재 진화나 신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 노인 등 피난약자가 화재를 진압하는 등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다.

대형화재에서 피난이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불나면 대피 먼저’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소방서에서는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위해 각종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 대피의 중요성을 알리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윤예심 완도소방서장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3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수도 고장신고	121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전기고장 신고	123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응급의료센터	1339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1989년 6월 29일 창간 **전남매일** 2005년 9월 21일 등록번호 광주가 14(일간)
회장 朴哲弘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金善男 편집국장 姜聲秀
대표전화 062) 720-1000 구독 신청 및 배달안내 720-1004, 010-4601-5323

정치부 (062) 720-1060~62	편집부 (062) 720-1073	기사제보
경제부 (062) 720-1066~67	논설실 (062) 720-1006	•TEL (062) 720-1050~53
사회체육부 (062) 720-1050~53	전산실 (062) 720-1033	•사회부장 010-5601-2219
사회2부 (062) 720-1043	월간국 (062) 720-1007	•FAX (062) 720-1080
동부권본부 (061) 743-4200~01	판매국 (062) 720-1004	•E-mail jndn@chol.com
문화부 (062) 720-1071	사업국 (062) 720-1011,1099	광고문의
사진부 (062) 720-1040	광고국 (062) 720-1016~17	•TEL (062) 720-1016~17
기획탐사부 (062) 720-1045~46	관리국 (062) 720-1012	•FAX (062) 720-1020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E-mail jnmi1000@hanmail.net

우) 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사설

호남 위한 아이디어가 없나 애정이 없나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을 보는 눈이 이제 호남으로 쏠린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1차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고 추석 연휴 직후에 치러지는 호남 경선(25~26일)에서 대세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시시각각 돌아가는 대선시계에 맞춰 광주·전남 행정당국은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가져올 대선공약을 발굴하느라 여념이 없다.

광주는 무엇보다 인공지능(AI) 생태환경 조성과 군 공항 이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며, 전남은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의대 설립 등이 긴요하다. 이 같은 현안에 대해 여권 대선후보들은 적극 지원, 또는 적극 검토를 밝히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광주와 전남을 위한 그랜드 비전은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후보가 그럴싸한 자체 공약을 내걸어 관심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가 “우리나라 항공 수출 화물의 98.2%가 인천공항을 통해 물류가 이동되다 보니 첨단산업이 광주, 호남으로 못 내려온다”며 “무안공항을 우리나라 4대 관문공항으로 만들어 호남 발전 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대선후보 심상정 의원은 “광주를 국가와 시장을 넘어 시민의 시대를 선도하는 ‘신민주주의 특별시’로 지정하겠다”며 아시아 민주인권공원 건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광주·전남은 누가 뭐래도 현 집권여당의 텃밭인데 이 텃밭을 기름지게 할 공약이 여권으로부터 풍성하게 나오지 않아 시민들은 아쉬워한다. 이를테면 한전공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같은 역대 후보자들의 공약에 버금가는 지역 발전안을 내놓아야 표심을 흔들 텐데 말이다. 표심을 얻고자 한다면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한반도 서쪽을 키울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호남 유권자들은 알맹이 없는 정치적 구호에 현혹해선 안 될 것이다.

자영업자 손실 최소화 염두에 둬야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외면한 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수칙이 또다시 연장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개인 방역 중심의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전국에서 자영업자들의 차량 시위가 펼쳐졌다. 광주·전남 참여자들도 시청 인근 도로에 모였다. 이들은 차량에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등의 현수막을 붙이고 도로를 달렸다.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따랐지만, 그 결과는 피와 눈물”이라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입장이다. 코로나19 치사율이 상당히 낮아졌고,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도 마무리 단계인데 영업 제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제한된 지 1년 반 이상이 지났다. 이에 정부도 제한됐던 일상을 단계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방역체계로의 전환을 모색중이라고 한다. 코로나 팬데믹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다. 생존권을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4차 대유행은 여전하다. 광주·전남도 외국인 사업장과 학교 등에서 지역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일상을 제약에서 회복하는 쪽으로 전환하려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은 더욱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 4차 대유행의 진정과 속도감 있는 백신 접종은 전제조건이다. 강화된 거리두기 기간 동안 의미 있는 변곡점도 만들어져야 한다.

단계적 일상 회복은 필요하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경계심이 떨어져 확산세가 가속화되면 현재 희망의 불씨마저 꺼트릴 수 있다. 정부는 더욱 굳건히 방역태세를 세우고 시민들도 개인 방역수칙을 한층 철저히 지켜야 한다.

순천공고 ‘학폭’ 일벌백계 해야

기자수첩
이주연
제 2사회부 기자

최근 순천공고에서 집단 학교폭력이 발생해 지역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또래 청소년 5명이 1명을 대상으로 1년 넘게 폭행을 지속해 온 것이다.

‘때린 티가 나면 안 된다’며 헬멧을 씌워놓고 구타를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 협박도 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러한 실태를 밝히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학교는 ‘피해자가 학교에 폭행 사실을 신고 한 적이 없어 전혀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를 왜 안 했냐고 타박하는 꼴이다.

순천교육지원청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국민신문고에 피해 사실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은 더욱 커졌다.

특히 해당 학교 교장은 ‘공론화가 되면 피해자만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피해자 가족에 대해 설득을 시도하는 등 사건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학생의 인권은 이미 버려진 지 오래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의 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교육 당국의 처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가 보호는커녕 피해자, 가해자 모두 같은 학생이기에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학교의 태도를 보면 피해자의 보호조치는 너무 미흡하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집단으로 벌어진 이번 순천공고의 학교폭력은 잔혹한 범죄행위다.

학창 시절 겪은 폭력 피해는 성인이 돼서까지 고통으로 이어진다. 학교폭력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 정신적 상처로 남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

경찰이나 교육 당국은 이 사건을 절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면밀히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순천공고는 모르쇠로 일관하지 말고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근절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